

제382회 국회(정기회)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업무현황

2020. 10. 8.



목 차

I . 일반 현황	1
II . 주요과제 추진 현황	3
1.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	3
2.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	7
3. 방송통신 이용자 권리 증진	10
III. 주요 현안 과제	13
1. 코로나19 관련 주요 조치 현황	13
2.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	14
IV. 참고 자료	15
1. 2020년도 입법계획 및 계류법안 현황	15
2.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 개요	16

I.

일반 현황

□ 연혁

- 2008. 2. 29. 방송통신위원회 설립
- 2013. 3. 23.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개편
- 2020. 8. 1.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

□ 주요 업무

- 지상파방송 및 종편·보도 PP 관련 정책
- 방송광고정책, 편성평가정책, 방송진흥기획, 방송정책기획
- 방송통신시장조사, 방송통신이용자보호, 시청자 권익증진, 인터넷 윤리 및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
-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등

※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, 정보통신망 상의 불법정보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‘방송통신심의위원회’가 수행

□ 소관 법률

분야	법률명
방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•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(일부)• 방송법 (일부)• 한국교육방송공사법• 방송문화진흥회법•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•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(일부)
통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전기통신사업법 (일부)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일부)•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(일부)•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• 전파법 (일부)

□ 조직 및 정원

- 조직 : 1처 3국 2관 18과(담당관) 2팀 / 1소속기관



- 정 원 : 274명 ('20. 10월 현재)

구분	정무직	공무원 단	3·4급	4급	4·5급	5급	6급 이하	계
본부	5	6	4	15	16	72	110	228명
소속기관	-	-	1	0	1	4	40	46명

□ 예산 및 기금 : ('19년) 2,592억 원 ⇒ ('20년) 2,600억 원 [+8억 원]

- (재원) 일반회계 610억 원, 방송통신발전기금 1,990억 원
 - (기능) 인건비 253억 원, 기본경비 42억 원, 주요사업비 2,305억 원

□ 주요 유관기관

기관명	대표자	주요기능	근거법률
한국방송공사 (KBS)	양승동	국가 기간방송으로서 국내·외 대상 방송 실시, 방송문화 보급 및 수반 사업 등	방송법 제43조
한국교육방송공사 (EBS)	김명중	교육·지식·정보·문화·교양 분야의 방송 콘텐츠 제공, 교육방송 관련 연구개발 등	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7조
방송문화진흥회	김상균	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 사업 수행 등	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
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(KOBACO)	김기만	방송광고 판매 대행 및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 등	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
시청자미디어재단	신태섭	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 등	방송법 제90조의2

①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

□ 개 요

- 미디어 융합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, 미래 지향적 제도를 정립하는 한편, 글로벌 미디어 경쟁력의 핵심인 콘텐츠 경쟁력 제고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으로 방송통신 분야 상생 도약 기반 마련

□ 추진실적

①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

- (방송규제 개선)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방송규제를 과감히 혁신하여 미디어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
 - 기술결합서비스^{*} 규제 완화(현행 승인제→신고제로 전환)를 위한 「방송법」 개정 추진(법 개정안 과기정통부 입법예고 중, 8월~)
 - * 지상파·SO·위성·IPTV 상호간에 전송기술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
 -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적 광고규제 해소 등 광고제도 개선을 위해 방송광고 제도개선 협의회 구성 및 운영
※ 협의회 5회 회의 개최(9월기준), 제도개선 방안 마련(12월)
 - 미디어렙 허가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허가 유효기간 단축 등 「방송광고판매대행법」 개정 추진(법 개정안 발의, 6월)
 - 협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, 협찬과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및 필수적 협찬 고지 사항을 명시하는 등 「방송법」 개정 추진(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 중, 10월~)
 - 지역민방 수중계 제도 및 1개 국가 수입프로그램(영화·애니메이션·대중음악) 편성 상한(80%) 개선안 마련 중

- (미래지향적 규제 개편)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하여 '동일 서비스, 동일 규제' 원칙에 따라 새로운 규제체계를 중장기적으로 마련
 - 방통위는 '중장기방송제도개선 정책제안서'(방송제도개선추진반, 3월 방통위에 제출)에 따라 방송·통신 통합법제도(안) 마련 중(12월)
- (5G·AI 서비스 규제 개선) 기술발전으로 새로이 도입되는 서비스의 성장기반을 고려해 적절한 수준의 규제체계 검토
 - 지능정보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보호 이슈를 발굴하고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발족·운영(4월~)
 - 위치정보를 활용한 5G·AI 관련 융합서비스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(허가제→등록제)(연중)
- (UHD 활성화 추진) 방송 산업 및 기술 여건 등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여 지상파 UHD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
 - 방통위·연구기관·방송사가 참여하는 「지상파 UHD 활성화 추진단」을 구성(3월)하여 향후 UHD 시설 및 콘텐츠 편성계획 등을 논의하고 통신사·가전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(~7월)
 - 모바일 등 혁신서비스 도입 관련 과기정통부와 협의 및 방송사업자·전문가 등 의견수렴 후 지상파 UHD 활성화 계획 발표(12월)

② 한류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

- (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강화) '미디어 빅뱅' 시대 성공전략의 핵심인 질 높고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 되도록 정책적 지원 및 점검
 - 방송콘텐츠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문화적 다양성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해 EBS, 지역방송, 공동체라디오 등 제작 지원(8월 말 기준, 258억 원 지원)

※ '20년 예산 : EBS 283억원, 지역방송 40억원, 공동체라디오 2억원, 통일프로그램 3.4억원

- (방송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원) 방송콘텐츠가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다각도로 지원 추진
 - 방송교류 활성화를 위해 방송 공동제작 국제컨퍼런스 개최(11월)
 -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 마켓인 MIPCOM에서 한국 주최국 행사 개최(10.12~10.15)
- (OTT 활성화 지원) 시장의 자율성·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장애 해소 및 방송시장 전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
 - OTT 협의체를 구성(8월)하여 사업자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, 저작권료 갈등, 수입 콘텐츠와의 내용심의 차별성 등에 대한 부처간 협의(9월~) 및 정책개선 방안 마련(~12월)

※ OTT 사업자간 제휴·협력 및 글로벌 진출방안도 함께 모색

(3)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

- (국내외 규제형평성 제고)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엄정 조사·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
 -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제 시행 점검(~6월), 해외 사업자 대상 이용자 피해 조사 및 제재(1월, 7월)

※ 구글(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, 1월), 틱톡(아동 개인정보 무단수집, 7월)

 - 주요 해외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, 민원센터 운영현황 등 '이용자 보호업무 평가' 실시·공개(10월)
- (방송시장 조사실효성 제고) 「IPTV법」 및 「미디어렙법」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이행점검을 강화
 - 불공정행위 사실조사 강화를 위해 IPTV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을 위한 「IPTV법」 개정 지원(법 개정안 발의, 7월), 「미디어렙법 시행령」 개정(6월 시행)
 -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의 시정조치 이행점검(8~9월)

- (불공정 개선·상생협력) 방송통신 시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국민불편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상생 협력 환경 조성
 - 방송·통신 결합상품 과다경품 실태점검(2월~), 타인명의 도용 등 휴대폰 불법 개통 행위 여부 점검*(12월)
 - * 검·경찰, 금융위, 과기정통부 등의 관련 자료를 제공 받아 추진
 - 5G 기반의 콘텐츠 활성화, 통신사와 중소CP 간 상생협력 유도 등을 위한 제3기 「인터넷 상생 발전 협의회」 운영(7월~)
- (공정한 외주제작 환경 조성) 방송 분야의 대표적 갑을관계인 외주 제작 시장의 공정 환경 조성으로 방송분야 상생협력 모델 정착
 - '17년도 재허가·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「방송프로그램 외주 제작 거래 가이드라인」 이행실적 점검(5~7월)
 - '20년도 재승인 시 외주 가이드라인 관련 조건 부가(4월)

□ 향후 계획

-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 업무 평가 결과 공개 : '20. 10월
- 지상파 UHD 활성화 계획 발표 : '20. 12월

②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

□ 개요

- 다매체·다채널 시대에 정보의 양은 급증했으나 미디어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와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방송의 신뢰도 제고

□ 추진실적

①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

- (엄격한 방송사 재허가 심사) 지상파·종편·보도PP 재허가(재승인)시,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,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전략 등을 중점 심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재허가(재승인) 여부 결정 및 조건 부가(3~12월)
 - '20년 상반기에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 된 종편PP(TV조선 · 채널A)
 - 보도PP(YTN · 연합뉴스TV)에 대한 재승인 심사 실시(3~4월)
 - 지상파 · 종편PP의 재허가 · 재승인 시 부가조건*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(9월)
 - * 경영 투명성 및 콘텐츠 투자 계획, 공정성 관련 법정제재 건수 유지 등
- (방송의 품격 제고) 무분별한 정보의 범람 속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송 보도와 자율적인 법령준수를 유도하여 건전한 방송문화 확립
 - '찾아가는 법규 설명회'를 통해 방송사·협회 관계자 등에게 방송 광고·협찬고지 관련 법령교육 실시(상시)
 - 품격있고 공정한 선거방송이 실시될 수 있도록 「제21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」운영(방송통신심의위, '19.12.16~'20.5.15 운영)
- (방송의 지역성·다양성 가치 확립) 콘텐츠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여론을 형성하는 소통플랫폼인 지역미디어 기능 강화
 - 지역밀착 콘텐츠 제작활성화를 위한 지역방송, 지자체, 지역별 시청자 미디어센터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(강원지역 정책협의회 구성 · 운영, 9월~)

- SKB · 티브로드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(1월), CMB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(5월) 등에서 지역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 등을 심사하고 지역성·공정 경쟁·시청자 권리 등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조건 부과
 -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('20년 34억원, 지역 18개사 33개 프로그램)하고, OTT 플랫폼에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추진(Wavve 완료, 왓챠 · 티빙 진행 중, ~12월)
 - (방송 종사 취약계층 권리 보호) 아동·청소년 출연자, 외주제작 인력 등 방송 종사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점검
 - 외주제작사 제작인력의 상해·여행자 보험 가입 여부 등을 방송 평가에 반영(11월)
 -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아동·청소년의 방송출연 근로 환경개선 등을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* 마련(12월)
- * 주요내용 : 아동 출연자의 근로기준, 출연자 신체접촉 및 부적절 언어사용 금지 등

② 방송정책 국민참여 확대

- (국민이 묻는 재허가) 방송사 재허가(재승인) 심사시,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방송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을 청취('19.12월, '20.8월)
 - 일반 국민이 심사 대상 사업자에 궁금한 점을 방통위에 제출하면 법인 대표자 등에게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등 의견청취 결과를 재허가(재승인) 심사에 반영(TV조선 · 채널A · YTN · 연합뉴스TV : 3~4월)

※ 11~12월에 진행되는 지상파방송 재허가 및 JTBC · MBN 재승인 심사에도 반영 예정

- (공영방송 입원 선임의 투명성 제고) 방통위의 공영방송 사장·이사 선임(추천)시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관련법 개정 지원
 -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관련 방통위 의견(국회 제출, '18.12.)과 국회 여 · 야 빨의 법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지원

- (국민이 참여하는 공익광고) 공익광고 신규 제작시, 국민제안 및 여론 조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관심사(예시 : 안전 및 환경 등)를 적극 반영
 - 유료방송(종편·보도·대형PP) 공익광고 의무편성비율을 상향(0.05%→0.1%)하고, 주시청시간대 가중치를 부여하여 편성 확대 유도(3월 고시 개정, 10월 시행)

(3) 재난방송 신뢰성 강화

- (신속·정확한 재난방송) 기존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안전정보 제공, 재난 취약계층 배려, 주관 방송사 역할·책임 제고 등 재난방송의 신뢰성·신속성 강화
 -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리정보를 활용한 재난상황 그래픽 기술을 개발(~11월)하고, KBS가 보유한 재난CCTV 영상을 타 방송사와 공유 실시(9월)
 -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관련 고시 개정 · 시행(3월), 재난방송 수어통역 인력 교육 및 확충(~11월)
- (재난방송 강화) 집중호우 및 태풍,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·정확한 재난방송 실시
 -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집중호우 시 지역특보 편성 등을 통해 지역정보 전달 강화(총 34회, 7~8월), 태풍 북상시 연속특보 편성하여 집중 보도(8월)
 - 주요방송사(지상파, 종편·보도PP 등 9개사)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정보 전달을 위해 채널 특성에 맞게 매일 정규뉴스, 특보 등을 편성(3월~)

※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겨울철에 정확한 미세먼지 재난정보(다큐, 캠페인 프로그램 등)를 제공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(1~3월)

□ 향후 계획

- 사회재난(감염병) 재난방송 실시기준 마련 : '20. 12월
- 방송사업자 재허가·재승인 심사 : '20. 11~12월

3 방송통신 이용자 권리 증진

□ 개요

- AI 활성화 등 지능정보사회 고도화에 따른 신유형 이용자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디지털 격차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송통신 이용자 권리 증진 정책 추진

□ 추진실적

① 불법유해정보 적극 대응

- (불법유해정보 유통 근절) 디지털성범죄 영상물, 음란물·도박·마약 등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여 청정 인터넷 환경 구현
 - 디지털성범죄물 식별을 위한 범부처 공동DB를 웹하드사업자 필터링에 적용(1월~), 웹하드사업자 기술적 조치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(4월, 8월, 9월)
※ 웹하드사업자 모니터링 인력증원(18→30명) 및 필터링 점검 강화(주1회→상시)
 - 마약, 여성폭력, 자살, 저작권, 혐오표현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여가부·인권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 추진 중
※ 딥페이크, 다크웹 등 신종기술 대응을 위한 다부처 회의 참석 등
 - 디지털성범죄물 근절을 위한 사업자 의무강화 법률(전기통신사업법, 정보통신망법) 개정(12월 시행) 및 시행령 개정 추진(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, 9월~)
 - (팩트체크 활성화)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의 대응 방안으로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
 - 전문가와 시민 등의 참여로 이뤄지는 팩트체크 협업을 지원하고, 팩트체크 기술 및 시스템 등을 공유하기 위한 오픈 플랫폼* 구축(11월)
 - 전국민 대상으로 팩트체크 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 교육 프로그램 제공(7월~), 팩트체크 결과물 등에 대한 공모전 개최 지원(9월)
- * 투명하고 공정한 팩트체크 기준 및 절차를 확립하고, 정부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운영

- (이용자 피해 예방) 음란물·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·청소년을 보호하고, 스팸·플로팅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
 - 청소년 보호책임자 제도 확대 운영('19년 63개 → '20년 97개 사업자), 청소년 보호를 위한 스마트폰 앱 기능 개선(5월, 9월)^{*},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·청소년 보호 지침 마련(6월) 등
 - *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몸캠퍼싱 방지기능 및 이용시간 자율 조절기능 도입
 - AI·빅데이터를 활용한 스팸 차단기법 고도화, 관계기관^{*} 간 협업 체계를 구축(1월~)하여 스팸 데이터 개방 등 추진 중
 - * 한국마사회,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, 금감원, 한국거래소 등
 - 플로팅 광고, 과도한 모바일 팝업 광고 등 이용자 불편 야기 광고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(6월~)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(12월)

(2)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강화

- (AI시대 이용자 정책 수립) 지능정보사회의 종합적인 이용자 보호 정책 업무를 수행할 ‘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’ 운영(1월~)
 -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운영(4월~), 국내외 사례 공유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(12월)
- (이용자 편의 증진) 통신서비스 이용자 불편사항 개선, 신산업 분야 관련 이슈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이용자 보호 강화
 -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시행(7월), 통신분쟁 온라인 실시간 처리확인 시스템 구축(12월), 재외국민 등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(12월) 등 통신 이용자 불편 사항 해소
- (시청자 주권 강화) 참여·공유의 시대가치에 맞춰 시청자의 관점과 권리를 적극 반영하는 능동적 시청자 참여모델을 만들어 시청자 주권 강화
 - ‘시청자 권리보호 전담기구 설치 근거 마련(시청자미디어재단 정관 변경, 1월), ‘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확대(‘19년 49개사→20년 51개사, 12월)

- (방송통신교육 강화) 국민의 방송통신 이해와 활용·제작 역량을 높이고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 참여기회를 확대해 미디어복지 구현
 - 전 국민에게 균등한 미디어접근권 보장을 위해 17개 광역지자체 대상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추진('19년 8개 → '20년 10개 지역으로 확대)하고 인터넷윤리체험관 구축도 확대('19년 4개소→'20년 5개소)
 - ※ 충북 시청자미디어센터(5월), 세종 시청자미디어센터·서울 인터넷윤리체험관(11월)
 - 비대면 시대 누구나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「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」 수립·발표(8.27.)
 - 학생·소외계층·마을단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전국민 대상 계층별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
 - * 초·중·고 대상 학교 미디어교육('19년 362개교→'20년 400개교), 마을 미디어 교육('19년 70개→'20년 80개 마을) 등 확대 추진

(3) 방송통신 소외계층 지원 강화

- (장애인방송 접근권 제고) 디지털 미디어 시대 모든 국민이 방송 콘텐츠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 방송이용 환경 개선
 -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(15,000대 중 9월 기준 8,000대 보급) 및 104개 방송사 장애인방송(자막·해설·수어) 제작 지원 실시(연중)
 - 청각장애인 300명 대상 음성-자막변환시스템 앱(보도분야) 시범 서비스 실시 및 9개 방송사* 스마트수어방송 서비스 지원(연중)
 - * 채널(6개) KBS·MBC·SBS·TV조선·JTBC·YTN, 플랫폼(3개) SKB·LG헬로, Skylife
- (소상공인 맞춤형 광고 지원) 방송광고를 활용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136개 사업자에게 방송광고 제작·송출비 16.4억원 지원
- (통신이용 접근성 강화) 정보취약계층(노령층, 장애인, 다문화가정 등)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 실시(9,398명, ~8월말), 교육 콘텐츠 개선(11월)

□ 향후 계획

- 「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」 시행 : '20. 10월~

III.

주요 현안 과제

① 코로나19 관련 주요 조치 현황

□ 개요

- 코로나19 관련 ‘가짜뉴스’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팩트체크 활성화 및 재난방송을 통해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 전달
- 온라인 개학에 따른 공교육 보완을 위해 EBS 및 시청자미디어 센터를 통한 학습 지원 및 코로나19 관련 스팸 대응

□ 주요내용

- (가짜뉴스 대응) 관계부처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, 가짜뉴스는 사업자에게 직접 삭제요청 혹은 방심위 긴급심의를 통해 신속 차단
※ 방심위 통신심의 처리현황(9.21.누계) : 4,458건(시정요구 196건, 해당없음 4,248건, 각하 14건 등)
- (팩트체크 활성화) KBS, SBS 등 방송사의 팩트체크와 네이버·다음·유튜브 등 민간플랫폼 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제공
※ 네이버·다음 메인 정례브리핑 및 ‘팩트체크’ 연결, 유튜브 검색 시 미디어채널 우선노출 등
- (재난방송 및 정보제공) KBS 등 주요방송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뉴스특보 실시 및 정보 프로그램 방송
- (EBS 온라인 개학 지원) EBS 유아·어린이 및 초등 1~2학년 대상 프로그램 편성 강화, EBS키즈 채널의 유료방송 기본채널 송출 등 시청접근권 확대
- (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‘원격강의’ 지원)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시설·장비·인력 등을 활용해 온라인 강의기술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지원
- (스팸 대응) KISA, 이통3사 등과 협력해 코로나19 관련 스팸 3,500만건 이상 차단(8월 기준), 전송자 행정제재 및 이용자 피해 주의 홍보

□ 향후 계획

- 코로나19 관련 위기상황에 대해 지속 대응 (상황 종료시까지)

②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

□ 개요

-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을 악용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인터넷 사업자의 관리책임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

<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방통위 추진경과 >

- | |
|---|
| ①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명백히 인지 시 삭제 등 의무 부과(’19.6월) |
| ② 방심위 내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신설(’19.9월), 심의기간 단축(3.2일 → 1일 이내) |
| ③ 디지털성범죄물 24시간 대응을 위해 방통위·여가부·경찰청·방심위 간 핫라인 구축(’19.11월) |

□ 주요내용

- (법·제도 개선)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발견 시 삭제,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의무를 부과하고, 과태료 이외에도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·전기통신사업법 개정(12월 시행)
※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불법편집물,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로 의무부과 대상도 확대
 - 디지털 성범죄물과 판매정보는 피해자 신고 없이도 자율협력시스템 또는 긴급심의를 통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신속히 삭제요청(방심위)
- (모니터링 강화)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된 불법영상물이 웹하드에 재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·점검* 강화 → 유포자 수사의뢰(매월)
* 웹하드 사업자 모니터링 인력증원(18→30명), 필터링 점검주기 확대(주1회→상시) 등
 - AI를 통해 웹하드상 불법음란물을 판별·채증하는 시스템 도입(KAIT), 디지털 성범죄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자동화(방심위)
- (교육 등 인식전환) 디지털 성범죄 인식제고를 위한 윤리 교육 강화,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관리앱에 몸캠피싱(몸캠 영상 유포 협박) 방지 기능 도입(5월) 등 추진

□ 향후 계획

- 전기통신사업법·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후속조치(시행령 개정 등) (~12월)

IV.

참고 자료

① 2020년도 입법계획 및 계류법안 현황

□ 입법 계획

법안명	주요 내용	국회제출
방송법	▪ KBS 정관 변경 인가 신청시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▪ KBS 송신 지원 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근거 규정 신설 ▪ 방송의 유지·재개 명령이 내려진 분쟁에 대하여 사업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개시 ▪ 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협찬의 정의 및 허용범위 조항을 신설하고 협찬관련 자료보관 및 제출의무 신설 등	7월 10일
	▪ 과태료 금액의 합리적 개선	10월 예정
		11월 예정
방송광고판매 대행법	▪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유효기간 단축 근거 마련 ▪ 방송광고판매대행자 허가·재허가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절차 신설	6월 26일
	▪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	8월 7일
IPTV법	▪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(IPTV사업자)의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제출 의무 규정 신설	7월 3일
전파법	▪ 지상파 방송사의 무선국 폐지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	6월 26일
정보통신망법	▪ 본인확인기관 휴·폐지신고 수리행위 명확화	7월 13일
위치정보법	▪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, 위치정보 접근권한자에 대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	8월 7일
전기통신사업법 ※ 과기정통부 입법계획에 포함	▪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하여 동의의결 제도 도입 ▪ 자료제출 거부 시 이행강제금 신설 및 대기업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	7월 7일

□ 계류법안 현황

(2020. 9. 18. 기준)

구 분	국회 심사 단계		계
	과방위	법사위	
정부 제출안	8	0	8
의원 발의안	47	0	47
계	55	0	55

②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 개요

1. '20년도 세입예산 및 기금수입계획

◇ ('19년) 12,902억원 → ('20년) 14,582억원 ('19년 대비 1,680억원, 13.0%)

□ (일반회계) '20년도 423억원, '19년도 대비 100억원 (31.0%) 증가

- 정보통신망법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련 업무이관으로 수입 증가 예상 (323억원^{*}→423억원, 100억원)
* 과기정통부의 세입예산 이체액(2.9억원)을 제외한 금액임

□ (방통기금) '20년 1조 4,159억원, '19년도 대비 1,580억원 (12.6%) 증액

- 주파수할당대가 5,040억원(48억원), 방송사분담금 1,926억원(\triangle 48억원), 재산(이자)수입 57억원(5억원), 기타수입 330억원(37억원) 예상
- 정부내수입 3,572억원(2,484억원), 기금예수금 2,074억원(순증), 여유자금 회수 1,160억원(\triangle 3,020억원) 예상

※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통위, 과기정통부 공동관리

< '20년도 세입 및 수입 현황 >

(단위 : 억원)

세 입 과 목	'19년 예산(A)	'20년 예산(B)	증 감	
			B-A=C	C/A*100
합 계	12,902	14,582	1,680	13.0
□ 일반회계	323	423	100	31.0
○ 과태료 및 과징금	318	416	98	30.8
○ 기타경상이전수입(정산잔액, 이자반납 등)	5	7	2	40.0
□ 방송통신발전기금	12,579	14,159	1,580	12.6
○ 자체수입	법정분담금(주파수할당대가, 분담금) 융자원금회수등(재산수입, 기타수입 등)	6,966 345	6,966 387	- 42
○ 정부내부수입(공자기금 회수 등)	1,088	3,572	2,484	228.3
○ 기금예수금(공자기금 전입금)	-	2,074	2,074	순증
○ 여유자금 회수(전년도 결산 이월금)	4,180	1,160	\triangle 3,020	\triangle 72.2

2. '20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계획

◇ ('19년) 2,592억원 → ('20년) 2,600억원 ('19년 대비 8억원, 0.3%)

□ (재원별) 예산 610억원 (\triangle 17억원), 기금 1,990억원 (25억원)

□ (기능별) 인건비 253억원 (\triangle 3억원), 기본경비 42억원 (2억원)
사업비 2,305억원 (9억원)

< '20년도 세출 및 지출 현황 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	'19년 (A)	'20년 (B)	증 감 (B-A)	%
총 지 출 <I+II>		2,592	2,600	8	0.3
재 원 별	I. 일반회계	627	610	△17	△2.7
	II. 방송통신발전기금 (기금총계 = ①+②+③+④+⑤)	1,965 (12,579)	1,990 (14,159)	25 (1,580)	1.3 (12.6)
	① 지출	소 계 (ⓐ+ⓑ) ⓐ 방송통신위원회 ⓑ 과학기술정보통신부	8,446 1,965 6,481	11,872 1,990 9,882	3,426 25 3,401
	② 기금관리비	43	45	2	4.7
	③ 정부내부지출 (공자기금예탁)	3,500	900	△2,600	△74.3
	④ 예수이자상환(예수이자상환)	-	11	11	순증
	⑤ 보전지출 (여유자금 운영 등)	590	1,331	741	125.6
	□ 인건비	256	253	△3	△1.2
	□ 기본경비	40	42	2	5.0
	□ 사업비	2,296	2,305	9	0.4
기 능 별	①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안전한 인터넷 활용기반 구축	281	287	6	2.1
	② 방송인프라 지원 및 시청자 권익보호	1,204	1,137	△67	△5.6
	③ 미디어다양성 및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	732	758	26	3.6
	④ 방송통신 운영지원	79	123	44	55.7